

DMZ평화연구소 2020세미나

DMZ미래 준비 발전 방향

우석대학교 DMZ평화연구소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DMZ평화연구소 세미나를 “DMZ의 미래 준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53년에 조인된 휴전협정의 산물인 DMZ는 정치·군사적 완충공간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특수한 지형이며, 언젠가는 그 역할을 다하면서 제거가 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다시피, 분단 기간 동안 인간의 접근이 제한되면서 조성되어 온 DMZ 일원의 자연생태계는 그 특수성과 보존의 가치로 인해 국내외 학계 및 관련 기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그린벨트로 승화된 내독일 국경선의 붕괴 후 보존 과정에서 나타난 교훈을 통해서도 보존 가치가 높은 DMZ의 자연생태계를 포함한 제반 보존 대상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사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붕괴가 되었고, 뒤늦게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는 과정 간에 많은 중요한 보존 대상들의 훼손 및 소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뒤늦은 복원 및 보존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한 많이 발생하였음을 관련 연구 및 자료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DMZ평화 연구소는 이러한 교훈적 사실에 입각하여 향후 필연적으로 도래할 DMZ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제반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0세미나도 이러한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토록 다 같이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세미나를 적극 후원해주신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3월
DMZ평화연구소장 황 성 한

목 차

1부 : DMZ 미래 대비 연구의 중요성.....4p

2부 :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DMZ의 미래 준비.....13p

3부 : 동북아의 국제정치 질서와 DMZ의 미래.....30p

4부 : 토 론

1부 DMZ 미래 대비 연구의 중요성

1. DMZ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베를린 장벽 교훈 적용.....황성한
2. DMZ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관리방안.....전성우
3. 비무장 지대 보존과 활용 정책.....황현호

DMZ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베를린장벽 교훈 적용 방안

우석대학교 과학기술대학 교수 황성한

1989년 11월 9일 발생한 내독일 국경선의 붕괴는 40여 년 간에 걸친 독일분단 역사의 종식을 가져왔으며, 구동구권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게 되는 단초가 됨으로써 20세기의 대미를 장식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미처 통일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맞이한 내독일 국경선의 갑작스런 붕괴와 복원의 과정 간 노정된 많은 문제점들과 이를 해결해 온 과정은 DMZ의 미래 준비 면에서 여러 교훈을 주는 있다. 특히 2019년은 내독일 국경선붕괴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러한 시기에 즈음하여 DMZ의 미래와 관련된 여러 교훈을 살펴보고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1949년 봄부터 1961년 8월 사이에 발생한 280~300만 명에 달하는 동독인들의 서독 탈주를 계기로 동·서독 간에 베를린 시내를 관통하고 둘러싸는 155(43/112)km의 베를린 장벽을 포함한 총 1,393km의 내독일 국경선이 8월13부로 설치되었다. 설치 이후 동독 주민의 탈주를 억제하는 기능을 지속해 오다가 소련의 주도 하에 추진된 개혁-개방정책의 여파로 인해 1989년에 붕괴를 맞이했다.

내독일 국경선 붕괴 후의 복원 및 보존 활동은 추모를 위한 역사기념물 복원과 자연생태계 보전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특징적인 사실은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내독일 국경선 붕괴 직후부터 시작된 데 비해 베를린 장벽을 중심으로 진행된 추모를 위한 복원 움직임은 파괴와 반성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자연생태계 보전 활동은 베를린시내의 장벽을 제외한 내독일 국경선 전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추모를 위한 복원활동은 베를린 시내의 장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89년 겨울, 동·서독의 자연보호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표한 내독일 국경선 일대의 자연생태계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한 결의서는 ‘Grünes Band(그뤼네스 반트: 녹색띠)’개념의 출발점이 되었다. Grünes Band는 통일 직후, 기존 동독과 서독의 여러 연방 주(州)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낸 내독일 국경선의 ‘핵심지역(Core Area)’에 형성된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이다. 내독일 국경선상에 형성된 ‘Biotop’(번역: 서식지역)이라고 불리는 여러 생태서식지의 중요성은 1970년대부터 여러 조사활동을 통해 알려져 왔다.

내독일 국경선이 붕괴된 직후, Grünes Band 조성 대상 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역할 분담 미흡과 소극적 자연보호 운동 등으로 인해 이 일대에서는 도시인프라 확충과 농업지대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장벽토지법에 따른 원소유주의 토지매입

과 농부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 및 상업·관광적 요소의 선점 등이 Grünes Band 추진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주요 이유로 장벽 붕괴 시 이에 대비한 계획이 전무했던 상황이 초래한 다음의 여러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먼저, 붕괴 이후 보존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부재했던 것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보존 목표의 부재가 초래한 관련 정부 정책의 부재 또는 초기 수립 및 이행 간 혼선이다. 세 번째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관련 정책의 통합·추진을 책임질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붕괴 후 목표 설정 및 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간 관련 조직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동·서독 통일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연보호구역 설정 등 면에서 미흡한 상태가 초래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친 Grünes Band 프로젝트 추진 결과 내독일 국경선 일대는 여러 동·식물 종들 간의 생태학적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주요 서식지의 교차지대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생태 서식 모델의 보존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Grünes Band는 유럽 전역의 Grünes Band 프로젝트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독일 국경선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DMZ도 필연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독일 국경선의 자연 생태계 보존 과정에서 노정된 여러 유형의 문제점과 최종적인 보존의 모습을 통해 DMZ의 붕괴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최종형상을 사전에 예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소중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독일 국경선의 교훈을 활용함으로써 DMZ의 최종형상 보존에 필요한 여러 정책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내독일 국경선의 여러 교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 가장 시급한 과제는 DMZ의 붕괴 후 보존이 필요한 최종체계(형상)를 사전에 도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내독일 국경선의 복구 과정을 통해 보존의 구체적인 모습이 자연생태계, 추모를 위한 역사유물 두 가지로 압축되는 가운데 이러한 보존자원을 교육 및 역사기행의 공간이자 관광자원으로서 활용 가능하다는 교훈을 인지한 상태이다. 이러한 개념 하에 도출된 최종형상은 DMZ의 미래대비 최종 목표로서 모든 관련 계획 이행의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형상이 설정되면 이를 달성하는 전 과정에 필요한 관련 정부 부서의 정책이 구비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 집행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및 마스터 플랜의 구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DMZ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관리방안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전성우

DMZ에 대한 접경생물권 보전 지역(TBR: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지정은 향후 DMZ의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주요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MZ의 미래를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개념 확립의 일환으로 TBR 지정을 위한 이행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협조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해보기로 한다.

먼저 DMZ의 TBR의 지정 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1. 관련되는 국가가 서로 연계하여 초기부터 단일의 TBR 지정을 추진하는 방식
2. 관련 국가가 각각 TBR을 지정한 후에 이를 추후에 통합하는 방식

이러한 개념에 의한 DMZ TBR의 범위는 비무장지대와 생물지리적으로 연결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2개 방식에 의한 추진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DMZ TBR 지정방식의 비교

구분	공동지정방식(1안)	개별지정후 통합방식(2안)
지정 방식	-남북한 합의에 의한 공동지정방식	남북한 양측이 각각 BR 지정을 추진하고 이를 추후에 통합하는 방식
장점	-지정으로 인한 의의 및 효과가 높음 -생태계 공동조사 등 남북환경협력 모델 제시 가능 -DMZ를 생태보전 및 평화지대로 유지 가능	-남북한 정치.사회적 여건 반영이 용이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 추진가능 -기존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경험 활용
단점	-북한과 높은 수준의 협의가 요구됨 -군사적 대치지역으로 북한의 거부감 존재 -남북한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음	-지정으로 인한 의의 및 효과 반감 -통합 전까지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기능하기 어려움 -DMZ 관할권 문제가 제기됨
비고	-국제적으로 상징성이 높고 최근에 유네스코에서 권고되고 있는 지정방식	-기존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시 주로 채택한 방식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지정된 TBR 5곳은 모두 두 번째 방식으로 지정된 바 있지만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서는 첫 번째 방식으로 지정을 추진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비무장지대 TBR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증대와 함께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동 지정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공동지정방식을 추진 할 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남북한 간의 협의를 통하여 TBR 추진에 대한 남북공동 합의를 도출해 내고, 이를 실무적으로 추진할 실무 작업반을 정부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한 공동의 생태계조사(필요시문화유적자원 조사포함)를 실시해야 한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에 자료교환을 하고 남북 공동으로 용도구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한 다음 DMZ TBR 신청서를 공동 작성하여 유네스코 MAB에 제출하고 지정을 받는다.

DMZ에 대한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을 위한 추진체계는 MAB 한국위원회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비무장지대가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북 협의 및 국제협력, 기초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과 신청서 준비, 지역 및 민간 참여부문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며 각 부문에는 중앙정부기관은 물론 지방 정부, 유네스코 및 관련 연구기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협조와 조정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즉 비무장지대 일대의 생태적, 문화·역사적 보전 가치와 생물권보전지역지정 의의 및 효과를 담은 팸플릿, 영상매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및 배포한다. (2) 토론회 및 세미나의 개최. 시민단체, 언론, 지역단체 및 지역대표, 연구기관 등이 비무장지대 보전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방안에 대한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여론 수렴 및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한다. (3) 외국의 지역사회참여방안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도입 및 적용하고 외국의 생물권보전지역 중 주민참여 및 소득증진에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 및 적용한다.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 대표자들을 사례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토록 한다.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 및 기구를 활용하여 DMZ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1. 비무장지대 보전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
2.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 위원회(EABRN) 활용
3.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B: Man and Biosphere) 활용
4. 그 외 국제기구 활용

DMZ의 TBR 지정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먼저 남북한 간 협의(協議)의 공간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활용가능한 소통 방안에는 남북장관급회담, 남북 국방장관 회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근거한 남북환경협력공동위원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5)를 근거로 한 남북군사 공동위원회, EABRN 등을 비롯한 국제회의를 통한 접촉

등이 있다.

이러한 기구를 활용하여 북한과의 소통 추진 시 북한소극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환경협력이 북한체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북한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Win-Win전략). 이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진행 중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에서부터 환경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2. 북한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에서부터 환경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3. 북한에 대해 체제위기를 초래한다는 인식을 주지 않아야 함,
4. 남북한 공동의 문제로 인해 쌍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에 대한 협력,
5. 북한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이익이 되는 것이어야 함,
6. 북한의 수용가능성을 고려,
7. 단계별 환경협력의 추진

DMZ의 TBR 지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크게 개선될 뿐더러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의 관계도 향상되어 북한의 경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기타 남북한 환경문제도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 지역을 세계적인 평화.생태.문화의 국제적인 관광지로 육성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기금을 확보할 수 있어 비무장지대의 관리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북한 헌법이나 환경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무장지대 보존과 활용 정책 고찰

우석대학교 과학기술대학 교수 황현호

비무장지대는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요 희귀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2018년에는 서식 가능성만 제기 되었던 반달가슴곰의 생존을 확인하여 DMZ의 생태적 가치가 입증되기도 하였다. 또한 선사시대 유물, 유적들과 방치된 문화재들이 곳곳에 있으며, 6·25전쟁 이후의 전쟁유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 문화유적들이 있어 의미 있는 자연속의 거대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산림청장은 독인 본 소재 연방 자연보전청(BfN, Bundesamt für Naturschutz)을 방문하여 한국의 접경지역 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DMZ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방향의 사업들은 끊임없이 논의 되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어느 한 장소 혹은 특정 시설물이 아니라 전체라는 공간에 대한 관점을 중시해야 하겠다. 이에 어떠한 사업 모델들이 적합한지 그리고 남북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이익이 되고 민족의 교류를 회복시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해 다음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비무장지대 가치의 재구성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지역 등은 모두 북한 내에 있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봉쇄되는 등 남북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당연히 그에 따른 가치 창출은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는 중립의 성격을 띠는 공간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남북관계를 떠나 사업의 유지를 도울 것이다. 또한 선사유적 그리고 역사문화자원의 신중한 개발을 통해 이곳에서의 부가가치는 대단히 높게 예상할 수 있겠다.

2. 안전함이 증명된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의 사업 실행 이전, 전제조건에는 안전함을 증명한다는 것이 반드시 우선 조건에 해당된다. 현 비무장지대에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 중에는 ‘지뢰’가 있다. 우리나라는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격하는 지뢰(혹은 철책선까지)에 대한 비인도적 무기체계가 아니더라도 생명체 이동(침입) 탐지기구 등 다양한 최첨단 국방기술로 대체가 가능하다. 또한 태풍 등의 자연의 영향으로 기존에 매설되어 있던 지뢰들이 지속적으로 유실되어 왔다. 더 많은 지뢰의 유실과 인명피해, 동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이 어 군사목적으로 사용되었다가 비무장지대에 무분별하게 방치, 폐기되고 있는 많은 낙후

되고 노후화된 군사시설물들이 있다.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것을 제외하곤 과감하게 철거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3.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재 발굴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수 세기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 문화재와 역사적 흔적들을 남북이 함께 조사, 연구, 기록하고 발굴하여 보존과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잊혀진 역사를 되찾을 수 있다. 나아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여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남북교류를 이어갈 수 있겠다.

4. 남북공동 생태환경자원 조사

비무장지대 일대는 분단 이후 50여 년간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 그리고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요 희귀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멸종되어가는 동식물종들을 복원하고 한반도 환경재생에 필요한 소중한 생태과학 자원과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동물, 식물, 식생, 지형, 자연경관 상황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연구를 위하여 남북공동으로 생태환경자원 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5. 비무장지대 생태평화둘레길

일과 라이프의 밸런스를 추구하는 ‘워라밸’, 자연과 풍경을 보며 걷거나 그 속에서 체류하며 동화되는 것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휴양과 관광을 위한 일반 여행과 다르게 역사적으로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장소나 재난, 재해 현장을 돌아보고 체험함으로써 반성과 교훈을 얻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비무장지대가 갖는 자연경관, 생태자원, 변화무쌍한 지형지물, 그리고 역사적 분단의 아픔 등 이 모든 것을 잘 결합하여 비무장지대의 테마길 ‘생태평화둘레길’을 조성해볼만하다. 세계 각지에서 걷기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역사와 자연의 조화로움을 통해 아름답게 기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국제기구 및 비정치적단체 유치

비무장지대를 UN이 관할하게 함으로써 남북 간의 직접적 무력 충돌을 제어해 왔으나 비무장지대가 ‘무인(無人)’지대여야 한다는 조건은 정전협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지대를 중립의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변화시켜 비정치적인 지식생산 등의 단체들이 유치되고 자리 잡는다면 비무장지대의 안전성 또한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7. 전제조건과 사업실행 이전의 과제

비무장지대 사업은 통일을 향해 긍정적으로 다가가는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국민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정치권과 고위관료들과의 부동산투기, 부당거래 등 사회적 분열과 공분을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의 상세한 편성과 집행내역이 공개 되어야 한다. 북한과의 논의 과정도 가급적 여과 없이 보도되어 사업 추진의 진정성과 예측과 기대가능성을 명확하게 해주어야 한다.

북한과 협의 없이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사업은 진행되기 어렵다. 일정 기간 내에 완성하겠다는 단발성을 띤 사업이 아닌, 멀리 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또한 비무장지대와 다른 사안을 연계하지 않는 ‘무거래’, ‘무조건’을 원칙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남북 모두가 균등하게 나누어야 할 것이다. 혹은 북한 내의 의료서비스 확대, 기아구제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국민과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비무장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사업을 강구하기에 앞서, 정전협정 이전에 이 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에 준하는 권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일괄 국유화하고 소유권 등의 권리가 존재했다는 것이 엄격심사를 거쳐 인정되는 이들에 한하여 위로적 성격으로 적정가격 수준에서 보상을 시행하고 비무장지대 내에 재산권에 대한 정비를 조기에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 남북이 합의하여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으로 신청하는 것은 그동안 DMZ 활용에 관한 여러 논의와 구상들 중에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홍보, 환경교육, 연구 등 일반적인 환경 중심의 국제협력체계에 합류한다는 의미가 크다.

앞에서 분야별로 그 가능성을 살펴본 바와 같이 DMZ의 활용방안은 다양하다. 향후 관련 연구와 정책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 비무장지대와 북측 접경지역은 의외로 무분별한 벌목과 개간으로 황폐해진 곳이 많다. 남방 비무장지대는 민간인 통제정책으로 환경적 차원에서 비교적 우수하게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북측과 마찬가지로 곳곳에 군사시설이 들어서 그 훼손 정도를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유지하면서, 제한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제, 통일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다.

지금까지 비무장지대사업의 나아갈 방향과 발전을 위한 조건들을 알아보았다. 본론에서 논의 된 내용 이외에도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상의 과정과 결과를 위해 끊임없는 모색을 해야 한다.

2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DMZ의 미래준비

1. 한반도 통일과 향후 DMZ 관리.....김경호
2. 군비통제 수준과 연계한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장광열
3.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미래 DMZ 평화생태적 이용 방안.....김성석
4. 세계 DMZ 현황과 한반도에의 시사점.....류창하

한반도 통일과 향후 DMZ 관리

국제정치학박사 김경호

대구광역시 자문대사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전)

주러시아 대사관 정무공사(전)

들어가며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DMZ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DMZ를 앞으로 평화공원과 생태지역 또는 관광지역으로 보존할 것으로 조성할 것인가, 아니면 통일이후 동 지역을 개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의 숙제라고 생각된다. 향후 남북한이 통일되고 DMZ를 경유해, 북한을 통과하는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가 연결되어 러시아를 통해 유럽까지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를 상상만 해도 매우 기쁘다.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비무장지대(DMZ)는 국제적 냉전과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상징하여 왔다.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도 부합하며, 군사정전협정의 규범력을 제고시켜 국제사회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통일한국의 환경·문화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DMZ에 대하여는 국제법으로서 군사정전협정이 적용되어 군사정전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지며, 국내법으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적용되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는 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애를 제거하고, 생태적 보존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DMZ의 사업 부지에 관한 관할권 또는 관리권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확정하고 이를 국유화하는 것도 필요하며, 지뢰 등 군사시설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또한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 세계평화공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와 지원을 마련하는 특별법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과 러시아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 주변 4각은 각각의 셈법이 다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통일에 있어 대부분이 부정적일 것이다. 미국은 현재와 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원할 수 있

고,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하면서 역내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일본의 경우도 통일된 한국을 바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가 연결될 경우, 한국을 물론이고 이웃 일본의 물동량을 한반도와 러시아를 경유하여 유럽 등지로 보낼 수 있어, 러시아로서는 정치적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북한당국에 철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설득 등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와 인접해 있어 남북철도 연결사업 이외에도 우리와는 경제적으로 상호 이익을 찾을 수 있는 프로젝트 들이 많다. 송전망 연결, 남북러 가스연결사업, 한국 기업의 극동 진출을 통한 합작사업 등 푸틴 대통령은 극동개발 부라는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매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한국의 기업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로서는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한국 등 동북아지역 국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 따라 러시아 시장을 어떻게 선점하느냐가 중요하다. 결국 러시아 신동방정책은 극동지역을 아시아 지역을 향한 에너지 수출 거점으로 삼고 물류 루트 중심지로 키운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향후 DMZ 관리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하느냐, 그러면 언제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 2018년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현재는 남북 간에 경색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DMZ와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실무적인 협의와 북한 핵개발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긴장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DMZ의 보존과 활용은 통일 후 남북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근본적으로 보존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지역이 보존된 상황 하에서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등 남북러 삼각경제협력사업등이 연계되어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군비통제 수준과 연계한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정치학박사 장광열

1950년 6월 발생한 한국전쟁의 결과물로서 남아있는 것 중 중요한 가시적인 산물을 꼽으라면, DMZ(Demilitarized Zone)라고 답변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곳 DMZ는 가장 아이러니 한 장소이기도 한데, 한국전쟁 기간 중 양 진영에 수많은 전사상자를 낳게 하고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자연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하고 교란되지 않은 생태계를 그대로 간직한 청정의 상징으로도 비견되고 있음이 그것이다. 또한 철새들이 한가롭게 날아다니고 초목이 우거져 시간이 멈춘 것과 같은 한가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남과 북의 초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이 또 다른 그것이라 할 수 있다.

DMZ는 동해안에서 한강하구에 이르는 구간에 이르는 MDL(Military Demarcation Line)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 이격되어 너비 4Km 정의되는 하나의 벨트를 의미하며¹⁾ 서해의 NLL(Northern Limit Line)과 동해의 NBL(Northern Boundary Line)에 의해 연장된다. 휴전이 성립된 이후 이 지역은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하여 병력 및 군사시설물의 배치를 제한시키고 인원의 출입을 통제함에 따라 다른 지역과는 달리 비교적 양호한 자연상태를 유지하여 왔으나, 북한지역은 그간의 잦은 수해와 남벌로 인하여 그 훼손이 심각하고 남쪽의 경우에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개발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있다.²⁾ 이와 같은 상황은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보존되어 왔던 DMZ지역을 오염시켜버려 결국은 다시는 복원되지 못하도록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전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미래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DMZ의 현재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를 두고 대치중인 남북한의 협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애초에 한국전쟁이 종결되고 정치 및 군사적인 이유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과거 냉전시대에는 안보적인 차원의 높은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DMZ를 두고 남북이 상호 협력하는 것은 매우 풀기 어려운 난제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탈냉전이 이루어지고 전통적인 안보위협이 퇴조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DMZ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안보적인 측면을 넘어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 DMZ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각이 다시 안보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행위적 관점에서의 담론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1)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14155&cid=40942&categoryId=31736> (검색일: 2020. 2. 24)

2) 손기웅,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새로운 도전," 『국토』 2013. 12, p. 36.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70년대 이후, 그동안 역대 한국정부는 DMZ를 비롯한 NLL 등을 활용하기 위한 생각에서 많은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미 냉전기에 시작된 이러한 방안들은 신뢰구축에서 시작하여 불가침협정을 거쳐 군축협상에 이르는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1988년에 이미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내세우고 이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초창기 구상은 북한의 부정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사문화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냉전기의 시대적 배경과 냉엄한 동서의 경쟁 구도 속에서 바라볼 때 어쩌면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군비축소와 연계시켜 고찰해 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군비통제는 운용적 군비통제에서 시작하여 구조적 군비통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북핵폐기에서 시작하여 이를 기반으로 운용적 군비통제를 경유하여 구조적 군비통제에 이르러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관념은 그동안의 모든 DMZ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노력은 군비통제가 전제되지 않은 그야말로 레토릭(rhetoric)적인 말잔치에 불과하며 군비통제적인 조치들이 DMZ의 평화적 활용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군사 및 안보적 문제들의 해결 접근 없는 남북 간의 경제, 문화 스포츠 등의 협력은 이루어질 수 없다³⁾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 의해 그동안 전개되어온 군비통제 활동은 다음과 같다. 탈냉전기가 되면서 1990년 남북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고 노태우 정부의 DMZ에 대한 남북공동출자 제안, 김대중 정부의 ‘남북군사합의보장합의서’를 통한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 노무현 정부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이명박 정부의 강화군의 나들섬 구상 경기도의 DMZ 평화공원 제안 등이 연속으로 제안되었다. 이러한 역대 정부의 DMZ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제안들도 군비통제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지 않았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군비통제는 평화촉진 정상화 그리고 통일, 침략이나 다른 공격 행위들의 억제, 위기회피 및 위기의 안정성 보장, 전략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군비감소 및 사회경제적 투자확대, 남북의 전략적 이익추구 및 지역의 체제변화 토대 마련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핵 폐기 -> 운용적 군비통제 -> 구조적 군비통제의 연장선상에서 DMZ의 평화적 활용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운용적 군비통제와 더불어 DMZ의 평화적 활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은 역대 DMZ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구상과 이러한 구상의 추진 성과를 고려하여 볼 때 많은 공감을 자아내게 한다. 그동안 안보논리에 입각하여 남북 간의 평화정착을 위한 제반환경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은 방안들이 시작도 못

3) Michael Vannoni, John Olsen, Jenny Koelm, Adriane Littlefield, Tae-woo, Kim, Sung-Tack, Shin, Myong-jin, Kim, and Sang-beom, Kim, “Inter-Korean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After 2003,” *SAND* 2003-2892, (2003), p. 3.

해보고 사문화되었다는 것이 그 증거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안보적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DMZ의 평화적 활용은 제대로 추진되기 곤란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며 이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필자도 이에 공감하며 안보적 환경의 변화 없이는 DMZ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기대도 이루지기 어려운 명제라 생각한다. 여기서 독특하고 다양한 남북관계를 고려해 볼 때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의 시각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과 군비통제와의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중범위 수준의 제도의 생성과 변화에 대한 이론으로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만들면 그 종속변수가 또 다른 독립변수가 되어 제2의 종속변수를 만든다는 것이다. 즉, 군비통제라는 독립변수가 DMZ의 평화적 활용이라는 종속변수를 만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를 놓고 보면 군비통제와 DMZ의 평화적 활용은 결국 제도화된 산물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제도는 중범위 수준의 제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비통제가 제도화된 산물이 DMZ의 평화적 활용에 대해 영향을 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종속변수가 다시 독립변수가 되어 군비통제의 제도에 영향을 준다는 순환관계로 해석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역사적 제도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군비통제가 일방적으로 DMZ의 평화적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군비통제로 인하여 DMZ의 평화적 활용이 변화하게 되고 이렇게 변화된 DMZ의 평화적 활용이 또다시 군비통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미래 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행정학박사 김성석

1. 평화통일을 위한 통합정책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이 결정하고 행동으로 움직여야만 한다. 이것이 헌법을 존중하는 유일한 통일의 길이자 방안이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기 위한 전제는 북한주민들이 우리 사회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북한주민들과 함께 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유일한 길은 북한주민들과 접촉하고 교류하여 그들 이 우리 사회에 해 눈과 귀를 열게 하는 것이다. 즉 북한과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우리의 국가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동력, 자원, 토지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결국 국가성장을 위한 북한과의 통합정책이 바로 우리의 통일정책이다.

2. 그린 데탕트의 개념

국제정치에서 ‘데탕트,’ 즉 ‘긴장완화’는 국가 간에 화해와 상호 인정을 바탕으로 서로가 필요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하면서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린 데탕트’는 현재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필수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가 역내 국가 간 교류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식적으로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환경문제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개선함으로써 상호가 혜택을 누리는 환경공동체를

형성하고, 그것이 경제·문화 분야는 물론 정치·군사적 차원에서도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도록 이끄는 국가성장 및 통일 환경 조성 국가전략으로 정의될 수 있다.

3. 그린 데탕트의 기본원칙

첫째, 국가성장에 기여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우리의 국가성장에 필요한 요소를 확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북한의 인력, 풍부한 자원 활용, 저렴한 토지 사용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준비와 촉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북한 인력이 우리의 앞선 사회와 수준을 체득하고 눈과 귀를 열고, 그들 스스로 북한체제의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이 경제 요구와 환경 요구를 동시에 수용해야 하며,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이 상호적으로 연계·파급될 수 있게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넷째, 비용-목표(cost-goal) 비용-효과(cost-benefit)가 크도록, 즉 효율성이 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효율성은 현재 남북한이 각자 추진하고 있는 제반 노력을 최대한 결집하고 통합시킬 수 있도록, 양자 혹은 다자 차원에서 문서화된 합의가 이루어질수록 높아질 것이다.

다섯째,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정치적·제도적·재정적·문화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한다. 효과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재정적으로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면 실행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사업이 국가의 정치 영역을 침범하거나 문화적 상이성을 존재 하지 않을 경우, 각자의 제도 조직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에도 실행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여섯째, 교류협력이 호혜성을 가져야 한다. 교류협력사업이 남북 상호 이해를 공유하는 분야에서 추진되고 그 결과 발생하는 혜택이 상호 간에 조화롭게 배분될 수 있어야 사업의 실행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관심사업 중에서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이 평화적·자발적으로 민족자결권을 행사하여 통일이 현실화 될 경우 한반도의 통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통일을 위한 외교 전략이 바로 ‘그린 데탕트’이다. 한편 한반도 차원에서 ‘그린 데탕트’의 추진을 고려할 때, 지정학적으로 남북 접경지역과 DMZ가 그 축이 될 수밖에 없다. 동 지역이 생태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 더 나아가 남북한의 모든 국가적 이해관계, 즉 정치외교·군사·경제·문화·환경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피해가는 ‘그린 데탕트’의 구상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접경지역·DMZ에서 남북이 환경·경제적으로 상호 이익을 도모하면서 환경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면 정치·외교·군사·문화적 차원에서의 교류협력도 모색하게 되는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갈등과 분쟁의 상징 지역인 접경지역과 DMZ를 남북이 평화적으로 이용·보전하는 데 합의하지 않는 이상 신뢰와 협력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 ‘그린 데탕트’는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를 전제하면서도 상호 간에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국가들의 제도·질서가 질적 변화를 이루는 기반 위에 각 국민들이 환경적 공동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 궁극적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모든 국민들과 후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여기에 덧붙여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다. 환경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우선적 동시 형성을 축으로 하여 정치외교·군사적으로 신뢰를 회복하여 화해협력하고,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넓히려는 것이 국가성장과 통일로 가려는 국가전략이다.

3. 그린 데탕트의 고려사항

그린 데탕트' 국가전략은 다음과 같은 고려에서 구상되었다.

첫째, 우리는 국가성장과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중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남북 간에, 동북아 역내에 상호 교류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북한 핵문제, 영토문제 등 첨예한 쟁점으로 인해 협력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국가 간 지속가능성이 큰 분야가 환경임에 주목하고, 환경 분야 교류협력이 제도적 차원에서 고도로 활성화되는 환경공동체를 우선적으로 형성하고자 한다.

넷째,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만큼 환경 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동시에 병행 추진하고자 한다.

다섯째,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협력은 결국 국가 간 정치외교 및 군사적 협력이 동반되지 않는 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고려 하에 환경공동체와 경제공동체 형성이 국가 간 정치외교·군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 속에 추진되도록 한다. 또한 환경 및 경제 분야의 협력이 정치외교공동체, 군사공동체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전개한다.

여섯째, 국가 간 환경·경제·정치외교·군사적 교류협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문화교류협력에 있음을 주목한다. 문화공동체 형성은 모든 차원에서의 교류협력과 공동체 형성을 촉발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도 고려하였다.

4. 결론

‘그린 데탕트’가 남북관계의 개선을 전제로 하여 시행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린 데탕트’ 자체가 기능주의적 접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바, 이에 입각한 교류협력사업이 환경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신뢰와 평화 속에 남북한과 동북아 국가들이 상생 번영할 수 있는 방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한 분야에서만이라도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고, 그것이 쌍방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그린 데탕트’가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 사이에 남북교류협력 필요성에 의한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언제부터인가 북한과 교류협력을 하면 북한에게만 이득이 되고 우리에게 별 효과가 없다는 사고가 자리 잡았다. 교류협력을 하면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돈만 가져다준다고 여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중단된 상태에 있는, 개성공단 근로자로 일했던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진 부분도 아쉬운 점이다. 그들과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기술 수준, 작업환경, 노동자문화 등 그들이 듣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다. 통일을 위한 통합의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이다.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북한을 방문하면 그들이 모든 방면에서 국면마다 치밀하게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응하고,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쉽사리 느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류협력을 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우

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국가이익에 배치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 왜 우리가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마음을 전하고, 우리 사회를 보여줘야 하는가에 한 국민적 공감의 우리 사회 내에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부정적인 것이다. 우리 헌법 제4조 통일조항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의하면 우리가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 체제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 사회를 듣고, 보고, 느끼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스스로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길밖에 없다. 북한주민의 눈과 귀를 열고 그들 에게 우리 사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들과 만나고 어울려야 한다. 그 길 뿐이다. 만남의 과정에서 우리의 동포애가 전달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DMZ 내에 남북이 공동으로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의 대규모 국립공원,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두바이의 최첨단 건축을 이용한 관광, 아프리카 사파리 공원 등을 벤치마킹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이용해서 전 세계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남북한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나아가 교류가 활발해 질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세계 DMZ 현황과 한반도에의 시사점

군사학박사 류창하

1. 개요

비무장지대(DMZ)⁴⁾는 전쟁이나 분쟁 이후 직접적인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간의 협약 등에 의해 군사 활동이 금지된 지역을 말한다. 대표적인 곳으로 한반도의 DMZ, 이스라엘-시리아 국경지대 등이 있다.

DMZ는 관련 국가(지역)의 상황 변화에 따라 설치되거나 제거되고 있다. 따라서 통행이 엄격하게 제한되기도 하고 평화공원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DMZ와 같이 각종 화기로 중무장한 상태로 대치되고 있지만, 최초 설치된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로 호칭되고 있다.

2. 세계의 DMZ 갈등 및 협력 사례

가. 세계의 DMZ 현황

세계의 DMZ는 정치·군사적인 설치 기준에 따라 상이하다. 비슷한 개념으로 ‘국경 장벽’이 있으나, 이는 국가 간에 가리어 막은 벽 또는 가로막는 장애물을 뜻하는 말로 주로 한쪽이나 양쪽이 상대를 배격하기 위해 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명한 장벽으로는 베를린 장벽, 모로코 장벽 등이 있으며 분쟁지역의 국경에는 삼엄한 경비와 높은 벽이 설치되고 엄중한 감시가 이루어진다. 적대국가 간에는 지뢰 매설, 중화기 무장, 촘촘한 철책 등이 장벽과 같이 설치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DMZ는 국경 장벽의 의미에 더하여 말 그대로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비무장 지대이다. 따라서 국경 장벽과 DMZ는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DMZ는 역설적으로 UN 등에서 파견된 평화유지군이 비무장이 아니라 무장하여 경비하고 있거나, 대치중인 양개 정부(조직) 간의 군사적인 무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치하고 있는 지역도 많다. 평화는 정치 및 군사력의 균형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이다.

DMZ로 구분되고 있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다음 [표 1]과 같다. 여기에는 항상 충돌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한반도를 비롯하여 국제협약에 의거 평화적인 이용을 보장받는 남극 및 우주공간까지 포함된다.

4)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非武裝地帶)는 통상 DMZ로 호칭된다. 따라서 DMZ로 통일하여 기술한다.

[표 1] 세계의 DMZ 현황(현재)

1. 한반도 DMZ(대한민국-북한)
2. 그리스 에게해 남쪽의 도데카니사 제도 일대(그리스-터키)
3. 올란드 제도(스웨덴-핀란드)
4. 그라운드 세이프티 존(세르비아-코소보)
5. 드네스트르 강 계곡 안전지대(몰도바-트란스니스트리아)
6. 쿠웨이트-이라크 국경 장벽
7.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태국-캄보디아)
8. 키프로스(지중해)
9. 시나이반도 지역(이집트-이스라엘 국경 지대)
10. 스발바르 제도(노르웨이-인접국)
11. 수단 공화국-남수단 국경 지대
12. 세우타 / 멜리야 국경 장벽(스페인-모로코)
13. 골란 고원(이스라엘-시리아)
14. 레바논 남부지역(이스라엘-레바논)
15. 남극
16. 우주공간 전체 및 지구 이외의 모든 천체

나. 주요 DMZ 현황

1) 세르비아-코소보의 ‘그라운드 세이프티 존’



코소보는 발칸반도에 있는 작은 나라로, 약 2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 88프로가 알바니아인이고 약 7퍼센트가 세르비아이다. 코소보는 끊임없이 세르비아에게 자치권을 요구하였으나, 세르비아는 세르비아 정교의 중심지가 코소보에 있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그런데 1991년 유고연방이 해체된 이래로 알바니아계 주민들은 코소보해방군을 조직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펼쳤고 1990년대 후반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 대통령은 인종청소의 목적으로 코소보 내 알바니아계 민족을 대량으로 학살하였다. 이로 인해 1만

여 명의 사망자와 80만 명의 난민들이 양산되어 국제문제로 확산된다.

코소보내전은 1999년 6월 종료되었고 세르비아 군은 철수하게 된 이후 나토 중심의 평화유지군이 코소보에 주둔하게 되었으며, 코소보와 세르비아 국경지대에 비무장지대인 그라운드 세이프티존(쉐도우존)을 두어 나토 중심의 평화유지군이 이를 관리하게 된다. 코소보는 2008년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40여개 서방 국가들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고 주권국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세르비아를 포함하여 중국 키프로스 러시아 그리스 루마니아 등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1년 북부 국경지역에서 나토 코소보 평화유지군과 세르비아계 주민이 충돌하여 2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의 중재 하 양국의 국경에 공동검문소를 설치하고 비무장지대인 그라운드 세이프티존(쉐도우 존)을 재정립하였으며, 이를 유럽연합 민간임무단이 감독하는 방식을 통해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 키프로스 ‘그린라인’



지중해 동부 섬나라인 키프로스의 터키계와 그리스계 사이의 민족분쟁을 막기 위해 1964년부터 설치됐다. 이 지역은 주민의 80%가 그리스계로 그리스 정교를 믿지만 나머지는 대부분은 터키계로 이슬람교를 믿어 민족 및 종교 분쟁이 극심한 곳이다. 1974년 두 공동체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서 건널 수 없는 경계선이 돼 버렸다가 30년이 지난 2003년에 다시 왕래가 재개됐다.

철조망이 180km에 걸쳐 있으며 두 공동체 사이에는 '그린라인'으로 통하는 완충지대를 유엔 평화유지군이 관할하고 있다. 폭이 3m인 곳부터 7.5km인 곳까지 다양하다. 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 중 하나이다.

3) 스페인-모로코의 ‘세우타 / 멜리야 국경 장벽’



세우타는 1415년 포르투갈령이 되었다가 1580년 동군연합이 성립되면서 스페인령이 되었고 1668년 동군연합이 끝난 뒤 1668년에 스페인에 정식 양도되었다. 멜리야는 1497년 스페인이 건설한 최초의 아프리카 식민지로 1497년부터 지금까지 스페인 영토로 남아 있다. 이후 세우타와 멜리야는 1995년 자치법규가 통과되어 자치시가 되어 스페인의 자치시가 되었다.

한편 모로코는 1975년부터 세우타와 멜리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모로코는 세우타와 멜리야를 스페인이 영유하는 것은 식민시대의 유산이라는 논리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스페인은 이 두 지역이 모로코가 국가를 형성하기 이전부터 스페인의 영토였다는 점을 내세워 반박하고 있다.

이후 스페인은 1990년대 중반 아프리카에서 스페인으로 들어오는 불법난민을 막기 위해서 세우타와 멜리야에 장벽을 설치하고 이 지역을 완충지대로 삼아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게 된다. 세우타 멜리야 지역은 현재 스페인의 정식영토로 유엔에서 인정하고 있고 이 지역의 사람들 역시 스페인에 계속 남기를 원하고 있으며 스페인과 모로코 역시 세우타와 멜리야에 대해 현상유지를 원하기 때문에(스페인은 바스크 분리독립 문제 때문에 세우타와 멜리야를 현재 모로코에 돌려주지 않으며 모로코 역시 유럽의 접점에서 오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세우타 멜리야 장벽과 비무장지대는 난민방지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4) 독일의 DMZ ‘그뤼네스반트’



한반도와 함께 냉전체제에 의해 분단된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은 군사분계선과 DMZ처럼 동독과 서독을 가르는 하나의 선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를 이루었다 이는 폭 5킬로미터의 제한구역으로 국경과 유사하게 운영되어 허가증과 검문소를 통해 접근이 매우 제한되었다. 그리고 이 구역 뒤 쪽은 우리나라의 남방한계선처럼 철조망이 설치되었으며 이 뒤로는 감시타워가 국경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약 700개가 세워졌다. 그리고 서독군을 비롯한 미국·영국군과 동독군에 의해 지켜졌지만, 동독으로 혹은 서독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쏠 수 있었다.

이렇듯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통제된 이곳의 특징 때문에 각종 야생동물과 식물들이 번성할 수 있었다. 1975년부터 환경운동가에 의해 경계지대의 자연적 특징과 생물 종, 서식지 목록을 만들면서 생물의 다양성을 확인하였고, 1989년 12월 바이에른에서 동독과 서독에서 온 환경운동가들과 분트에 의해 ‘그뤼네스반트’에 대한 이름과 개념이 탄생하였다.

독일 통일 후 그뤼네스반트는 엘베강 일대와 하르츠 산맥 국립공원 튀링겐 숲과 프랑켄 숲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109 종류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독일 최대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다. 이곳은 특히 독일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서식지로 유명하며 그뤼네스반트의 28%가 자연보호구역이고 85%가 원시림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튀링겐 숲, 프랑켄 숲, 하르츠 산맥, 슬레이트 산맥 등지에서 지속가능하고 자연보존적인 관광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 구간에 인도와 표지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시회를 개최하고 안내소와 전시관을 설치하여 국경지대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들을 보여주는 동시에 뛰어난 자연환경과 생태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3. 한반도에서의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DMZ는 평화적인 이용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갈등과 충돌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특히 한반도의 DMZ는 한국전쟁 이후 MDL(군사분계선,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중심으로 남북 각 2km 지역(총 4km)로 정해져 있었다. 군사 활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가장 군사적인 대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양측 다 철조망 등의 장벽을 세우고 서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 활동을 벌이면서 무력 충돌도 발생하는 곳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DMZ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쟁 및 충돌의 위험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DMZ 이용에 대한 유사사례의 지속적인 검토 및 발전방안 도출

한반도와 같은 과거 또는 분단국가나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국가의 DMZ 관리의 사례를 세부적으로 연구하여 적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례는 다음 [표 2]와 같이 과거 분단국가였거나, 현재도 여전히 분단국가이거나, 적대적 또는 비적대적 접경국가로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⁵⁾

[표 2] DMZ 접경지역 사례

구 분	사례지역	접경유형	접경 길이/폭/면적	정치군사적 특성	현재 이용상태
분단국가 (과거)	독일	냉전지역	• 길이 1,393km • 폭 0.5~2km	통일 전까지 '철의 장막'으로 삼엄한 무장 및 이동 통제	그뤼네스반트 생태네트워크
	예멘	냉전지역	• 길이 1,000km 내외	아랍대립으로 분단된 후 전쟁 발발과 이동 통제	통일전 유전 발견으로 공동개발 후 현재 석유생산
분단국가 (현재)	키프로스	비무장 지대	• 길이 186km, • 폭 < 7.4km (니코시아 3.3m) • 면적 346km ²	그린라인에 의해 분할되고 수도 니코시아도 양분, 삼엄한 무장 상태	여전히 DMZ 존재하나 국경 검문소를 통해 남북간 통행 자유는 보장된 상태, 실질적 경제협력단계 진입
적대적 접경국가	에콰도르-페루 (콘도르 산맥)	분쟁지역	• 면적 16,426km ² (평화공원)	식민지 독립 후 국경선 논란에 따른 영토분쟁	접경평화공원 (양국의 여러 보호지역 결합)
	핀란드-러시아	냉전지역 EU경계	• 길이 1,250km, • 폭 핀란드 0.5~2km, 러시아 20km, • 면적 약 10,000km ²	냉전 당시 엄격한 국경통제, 이후 통제 완화되어 국경검문소 통행 가능	다수의 보호지역 연계 (타이가산림, 이탄지, 호수)
	홍콩-선전	냉전지역	• 길이 약 30km • 면적 20km ²	영국 조차지로서 홍콩이 귀환되고, 중국 공산화 이후 왕래 단절	접경지역에 중국은 경제특구 홍콩은 신개발지구 조성
비적대적 접경국가	폴란드-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동카르파티아)	공존지역 EU경계	• 면적 213km ²	과거 잦은 전투로 인해 3국 주민간 관계는 비우호적, 헬겐조약에 의해 우크라이나 국경은 이동 통제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3국 6개 보호지역 결합)

나. DMZ에서의 경제적 협력 추진

군사적인 충돌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한반도의 DMZ는 경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2의 개성공단과 같은 상호 경제적인 공동이익을

5) 박은진 등, “분단대립 접경지역의 해외사례와 한반도 DMZ의 시사점”, 2012, 경기개발연구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동시에 환경보호 차원의 조사와 협력을 병행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은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DMZ 이용의 경제적인 협력 사례

다. DMZ 발전을 위한“한반도 비무장지대 관리위원회(가칭)”설립 및 운영

기존에 남·북간에 합의된 기구는 1991년 12월 13일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하여 설치된“남북군사공동위원회”이다. 그러나 이는 민감할 수 있는 정치·군사적인 의제에 집중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에 서로 간에 양보하기 어렵고 대립하고 정치적인 선전에 집중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협력이나 수자원의 평화적인 이용, 역사 유적지 및 환경보존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장기적인 평화정착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거버넌스’설립 및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강구

한반도의 DMZ는 정치·군사적으로 대단히 예민하고 충돌 가능성이 상존함을 볼 때, 정부(가브먼트, government)보다는 민간 시민의 참여에 의한 거버넌스(governance)에 의한 DMZ 발전을 추구한다면 정부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또한 남북한 서로 간에도 정치적인 대립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3부 동북아의 국제정치 질서와 DMZ의 미래

1. 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 방안.....남궁승필

2. DMZ의 평화적 이용 구현을 위한 제언.....조현주

3.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실현방안 연구.....조성호

DMZ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

우석대학교 문화사회대학 교수 남궁승필

DMZ일원의 환경보전을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관리 권역 설정, 권역별 환경보전방안, 추진과제 및 실천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세미나의 발표를 위하여 기존 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본방향으로 기본이념, 원칙과 환경보전전략을 기술하였으며, 특히 환경보전전략은 공간환경지도의 작성을 통한 환경계획의 기본적인 틀 수립, 권역별 차등관리, 환경정책의 불공정한 분배효과 시정, 소극적 규제정책에서 적극적 보전정책으로, 이해당사자간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관리권역의 설정에서는 현재 환경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토환경성평가항목 및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권역을 설정이 필요하다. 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자연환경.수질환경.국토 및 도시환경 부문의 법제적 평가기준과 종 다양성, 식생등급, 희귀종 및 멸종위기 종 발견지점 등을 고려한 환경.생태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5등급으로 구분한 환경보전 관리권역을 설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1등급은 핵심지역으로 최우선 보전지역이고, 2등급은 우선적 보전이 요구되는 완충지역, 3등급은 일정한 조건하에 친환경적인 개발과 이용이 요구되는 전이지역, 4등급은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되, 3등급보다 개발이 용이한 전이지역, 5등급은 기(既) 개발된 지역이다. 관리권역별 등급의 분석결과 전체 관리범위 7,718.76km²에서 핵심지역인 1등급지역은 55.51%인 4,284.85km², 완충지역인 2등급지역은 23.45%인 1,809.76km², 전이지역 중 3등급지역은 8.20%인 632.98km², 전이지역 중 4등급지역은 2.41%인 186.27km², 기 개발지역인 5등급 지역은 5.09%인 393.00km², 등급 외 지역은 5.34%인 411.90km²로 나타났다. 여기서 등급 외 지역은 자료의 부족으로 토지의 환경성을 평가할 수 없는 지역이다. 등급 외 지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부 민통선이북지역에 있어서 환경성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공간환경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통선이북지역에 있어서 공간환경자료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관리권역별 차등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역별 관리원칙 및 기준이 필요하다. 1등급지역은 최우선적으로 보전하며, 원칙적으로 일체의 개발을 불허한다. 그리고 녹지거점으로 환경을 영속적으로 보전한다. 2등급지역은 개발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법적인 혹은 제도상의 허용)에 소규모의 친환경적 개발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전이지역 중 3등급은 개발의 규모, 행위, 내용 등을 고려하고, 환경성평가를 통하여 조건부로 개발을

허용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로 생태계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한다. 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환경계획을 반드시 수립한다. 전이지역 중 4등급지역은 3등급지역보다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발수요관리를 전제로 친환경적 개발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환경계획 수립 후에 개발계획이 진행되도록 한다. 5등급은 개발허용지역으로 기(既) 개발지나 이미 개발이 상당부분 진행 중인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의 개발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개발을 수용하고, 무엇보다 계획적 이용을 추진하되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이 상호 연계되어 지역 전체의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또한 권역별 환경보전에 포함될 부문별 환경보전방향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요한 각 부문은 자연자원, 토지이용, 산업활동, 관광활동, 군사활동 등이다. 자연자원의 관리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생태계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습지생태계 보전, 취락 및 훼손생태계 복원 등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이용은 계획적인 토지이용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 개발사업 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권역별 차등적인 토지이용방안이 필요하다. 산업활동은 고품질경제 및 우량경제활동(Quality Economies: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활동)의 육성이 요구된다. 관광활동은 지속가능관광의 지향과 벌꿀통 개발방식(기존 도시 및 취락 지역의 중점개발+단위관광지의 숙박시설 최소화+거점지역과 단위관광지의 교통 연계)이 이루어져야 한다. 군사활동은 군의 환경보전활동 계속적 추진, 군(軍) 관할구역 내의 정밀생태계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작전성 검토 시 환경성 검토 병행 실시, 민.관.군의 협력체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추진과제 및 실천방안에는 법령의 정비, 지역주민 보상 및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 국제적 보호구역의 활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의 정비는 현행법의 개선과 향후 DMZ 및 민통선이북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DMZ일원의지속가능한관리를위한국제협약」의 체결과 DMZ일원지속가능관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방안으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수제를, 영농행위 등 친환경적 행위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자발적 협약을, 친환경적 개발 및 이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유도하기 위한 간접적 지원방식이 필요하다. 민관협력체제 구축에서는 정부부문과 지역주민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갈등해소와 합의형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이해당사자간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민관협력체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환경부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비무장지대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지방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지역(합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국제적

보호구역 제도의 활용은 먼저 국내 법.제도적으로 DMZ 일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공동으로 유네스코 BR의 지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BR의 핵심지역이나 핵심지역과 연결된 주요 생태계를 세계유산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 간 중복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랍사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BR과 연계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랍사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러한 제반 방안의 강구를 통하여 DMZ 일원의 종합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DMZ일원의 환경계획이 단순히 서술적으로만 수립되어서는 환경계획이 의도하는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계획을 공간화하여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간화된 환경계획은 공간개발계획과 연계되어 개발행위로부터 야기되는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고, DMZ 일원의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세미나를 통하여 강조하자 하는 DMZ 일원의 관리방안의 중심에는 인간활동과 자연생태계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성이 놓여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DMZ 일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DMZ 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자원, 토지이용, 산업 및 관광, 군사활동 등 각 부문에 대하여, 토지환경성 등급인 1등급에서 5등급에 대하여 차등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법령의 정비, 주민보상 및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 국제적 보호제도 활동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강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환경관리방안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 구현을 위한 제언

연구교수, 전남대 유라시아 연구소 조헌주

한국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는 남북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군사적 완충구역으로 1953년 7월 27일 6·25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이 대치하고 있던 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은 임진강 하구에서부터 동해안까지 약 200m 간격으로 설치된 1,292개의 표지판을 잇는 가상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쌍방의 적대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각각 2km씩 후퇴하여 설정된 완충구역이 바로 DMZ이다.

휴전 이후 지난 70여 년 동안 DMZ는 분단 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하는 비효율적 공간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에는 생물다양성이 높고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 및 유지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귀중한 자연의 보고(寶庫)가 되었다. 최근에는 유네스코의 접경 생물권보전지역(TBR: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生物圈保護地域)이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임진강 유역을 람사르습지에 등재 신청하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 차원의 생물다양성보전지역이 되었다. 따라서 세계 유일무이한 장소인 DMZ에 대한 보전 및 개발방안 연구는 세기의 관심사로 자리 매김하였다.

최근 들어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논의,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DMZ평화지대 제안 등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 및 완화 분위기가 아직은 북미 간 핵 폐기 협상 문제로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조만간 북미 간 실효성 있는 협상결과가 도출된다면 DMZ 생태계 보전, 남북경제협력사업과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접경지역종합계획이 가시화되고 다양한 DMZ 활용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 그 동안 DMZ의 지속가능한 평화적 이용 관련 다양한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치의 진전도 보이지 못한 것을 직시하며 DMZ의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와 국내, 남북관계 및 국제적으로 어떤 의미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한 평화적 이용 방안의 실천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상생 공영과 민족통일에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DMZ가 최종적으로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장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평화적 이용과 발전 차원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DMZ 평화적 이용 연구 추세는 크게 광역(외교/군사) 및 세부영역(경제·국토관리·환경·문화관광적)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 세부 영역 분야에 집중되어 연구해왔다. 주요 연구 범주는 다음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선결 요건 연구, DMZ의 생태자원 보전과 개발을 통한 평화적 이용 방안 연구, DMZ의 세계평화공원 조성 방안 연구, DMZ의 평화생명마을 및 평화대학 설립, DMZ 성장 패러다임으로 관광산업을 활용하자는 연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DMZ의 가상현실 구현 연구, DMZ를 예술과 연계한 연구, DMZ 평화구축을 위한 전략 연구, 인문학의 시각에서 본 DMZ의 미래 연구, DMZ 국가총력 사업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DMZ 평화적 이용과 생태자원 보존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DMZ의 평화적 이용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통해 평화적 조성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 없이 DMZ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활용한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DMZ 및 접경지역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 국토 중심지대(Hub)에 풍부한 산림생태계 / 국토 광역생태축 연결고리 - 수도권 및 동북아 경제권 배후 시장 - 생태, 평화, 문화유적의 복합기능 à 다양한 동·식물 서식지(자연생태계 순환 연구 가능) - 가용 토지 및 활용 가능 자원 풍부 à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으로 미래의 자산 - 미지의 미공개지역의 신비성 à 생태·안보 관광사업에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	- 정확한 생태계 파악 미 실시 - 군사보호시설의 존재로 과도한 규제에 재산권 침해로 지역주민의 소외 의식 - 군사시설 입지로 생태계 파괴 - 산업구조 취약 및 SOC부족 - 사업 추진 시 남·북 정치/군사적 영향 심각
기회요인 (Opportunities)	위협요인(Threats)
- 접경지역 지원법 - 평화의 상징, 남북 교류·협력의 촉매 및 교통망 연결 - 세계적인 생태관광지/ 생태 학습장 육성 가능 à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 UNESCO 접경생물권보전지역 / 세계문화유산 등록 지정 가능성 존재 à 국제기구 관심 증대 - 개성 공단 운영 / 금강산 관광 활성화	-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비한 개발 압력에 생태계 파괴 / 난개발 우려 à 사회적 비용 증가 및 DMZ보존에 부정적 - 핵 문제 등 남북문제의 불가측성 - DMZ 내 무기의 완전 제거 (대인지뢰 등) - 획일적 규제 마찰 및 토지소유권 분쟁 - 접경지역을 군사적 대치지역으로 인식

상기 SWOT분석을 통해, 강점을 활용하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SO전략 차원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은 국가 신인도 제고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생태/안보관광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적 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DMZ 내에 평화산업단지나 통일 특구 조성 등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경협 활성화는 물론 본격적인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셋째로 DMZ 개발을 통한 남북간 교통망 연결은 한반도를 동북아의 허브(TSR, TCR, Asian Highway 6))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로 UN을 포함한 국제평화·생태·문화 관련 기구,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및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면 DMZ가 세계적인 생태관광지와 학습장이 될 것이다.

6) TSR: Trans-Siberian Railway, TCR: Trans-China Railway)

이 같은 DMZ 평화적 이용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DMZ 개발의 추진 목표를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 추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 안정과 남북경제공동체 및 환경공동체 형성에 두는 한편, 한반도의 녹색 성장과 평화 사업의 동시 지향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북측의 수용 가능성과 유무형의 파급 효과가 큰 부문부터 우선 추진하며, 지역적으로는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과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 2차 남북정상회담과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019년 2월 베트남 2차 북미정상회담,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 등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의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해로 남을 것이며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긴장완화를 넘어 중단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 DMZ의 지속가능한 평화적 이용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사업과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조기에 가시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DMZ 생태계 보전과 개발이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평화적 이용과 발전방안을 법과 제도, 그리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DMZ 개발은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으로 연결되어 ‘교량국가’로의 발전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비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유엔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것이기에 북미 양자 간 평화구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DMZ의 지속가능한 평화적 이용과 발전을 위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우리의 전향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이므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제안과 시범사업 추진이 요구되며 북한에게도 DMZ의 평화적 공동 개발을 통해 실제로 많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득시켜야 하고 점진적으로 북측이 선호하고 상호 부담이 없는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의 국제 이슈화 차원에서 DMZ를 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 국제적 지명도가 더 높아지면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 소득증대가 이뤄지면서 지방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 UN 대북 제제와 무관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 UN Peacekeeping Center⁷⁾, Peace University, 생태/문화 관련 기구 등을 남북 및 국제적 합의에 의해 ‘평화지대’를 만들어 유치한다면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 전사를 길러내 DMZ를 항구적이면서 실효성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

7) 평화유지활동 총괄 및 교육훈련 주관부서는 UN산하 The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DPO)이며 주무부서는 Policy, Evaluation and Training Division(PETD)임. 현재 운영중인 야전 PKO 교육훈련본부는 Ghana에 ‘Kofi Anan Peacekeeping Training Center’가 유일하며 Canada에서 운영하였던 ‘The Pearson Peacekeeping Center’는 2013년에 폐쇄되었다.

하면서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 협력 거점으로 재탄생하고 향후 개성-판문점간 평화협력 지구를 지정할 경우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DMZ의 생성과정에서부터 현재의 남북관계는 물론 땅굴, UN사 군사정전위원회, GOP, 브랜드와 이미지, 남북 물류, 판문점, 생태환경, 지역경제, 민통선 문화자원, 관광, DMZ의 평화적 활용, NLL, DMZ관련 법률적 방안 등 향후 통일에 대한 담론까지 DMZ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DMZ Academy(가칭)’를 통일부 산하에 신설하여 DMZ 전문가 양성 및 통일 공감대 형성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과거 정경분리 원칙을 중시했던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정치·군사적 문제의 동시적 해결을 모색하는 신기능주의적⁸⁾ 차원의 접근 방식이 남북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DMZ의 지속가능한 평화적 이용은 경제적 이익과 평화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평화·경제 사업이며, 남북한이 한 민족으로 생활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 형성 사업으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그 발전 목표는 앞으로 한반도가 경제성장, 사회발전, DMZ 환경 지속성이라는 3가지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 목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8) 국가 간의 통합과 평화의 유지는 비정치적 영역만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적 접근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실현방안 연구

대덕대 초빙교수 조 성 호

현재 호주산불, 기상이변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DMZ 내 생물다양성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생태·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다. 이러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작성된 논문내용을 대략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남한 정부의 노력이다. 최근 정부(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는 DMZ 지역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추진하고 있고 PLZ(생명평화지구)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통일시대에 DMZ 지역을 평화의 상징, 인간·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해결과제이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중단기적으로 DMZ 내에 특정공간을 지정하여 남북 및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를 평화의 공간적 구현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통해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조,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이해와 협조, 주민참여와 주민 간 협조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현 실태와 실현방안이다.

먼저 현재의 실태는 남북 간 교류가 경색되어 있어 남북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해나가야 되나 지금까지는 남한이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실정이다.

또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관리차원의 방안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DMZ 특성상 공원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데 없는 상태이며, 국제법상 어떠한 방법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사전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실현방안이다.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합의서 작성하여 공원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남북합의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DMZ세계생태평화공원 특별법을 제정함을 물론 DMZ세계생태평화공원 토지 재산권 관련 법적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아울러 정부차원의 관리기구를 운영하고 국제적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활용하여야겠다.

이상과 같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작성된 논문내용을 살펴본 있는데 저의 의견은 한마디로 절대 공감이다.

다만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이 있으리라고 사료되나 그 가치를 생각하면 끈질긴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내·국외적으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다양할 활동을 통해 공감대 확산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면 좋겠다.

4부 토 론